정월대보름 고싸움놀이 정월대보름인 지난달 28일 광주시 남구 칠석동 고싸움놀이 전수관에서 풍년을 기원하는 고싸움놀이(중요무형문화재 제33호)가 열렸다. '광주칠석고싸움놀이 보존회'는 고싸움놀이를 보존하기 위해 지난 1983년부터 축제를 열고 있으며, 축제 이틀째인 이날 유인촌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이 참관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민주 이번엔 '현직 평가' 논란

공심위 공천방식 논의…도입은 어려울 듯

시민배심원제 도입·경선시기는 갈팡질팡

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혁공천 차원에서 현직 광역·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현역 평가' 카드를 꺼내들었으나, 도입은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공천배심원제 적용도 갈팡질팡하고 있고, 경선 시기도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예비후보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현직 평가 강행?**=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이하 공심위· 위원장 이미경)은 지난달 26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번 지방선거에 재도전하는 현 광역·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 업무 평가를 실시, 공천과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평균 점수에서 처지는 현직 단체장 및 지방의원은 공천에서 배제하자는 것이 쟁점이었다.

하지만 공심위는 절대적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합의점 도출에는 실패했다. 다만, 중앙당 및 시도당 공심위에서 현직에 대한 평가를 통해 공천 심사에 반영하는 정도로 매듭지었다. 이에 따라 현직 평가는 후보 압축 정도에서나 적용될 전망이다. 공심위원인 강기정 의원은 "공심위에서 2시간 이상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기준을 적용, 현직을 공천에서 탈락시키는 방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 여부**=광주시장 후보 경선에서의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 여부는 최고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지어질 전망이다. 오영식 공심위 간사는 "최고위에서 광주시장 경선에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을 결정한다면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서의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 여부도 아직 미지수다. 내부적으로는 시민배심원제와 국민참여경선을 함께 진행하는 혼합형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광주나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경선에서의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 여부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중앙당에서는 광주지역 2곳 정도, 전남지역 3~5곳에서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나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어 어떠한 결론일 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다.

◇**광주시장, 전남지사 후보 경선 시기**=민주당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이하 공심위)는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후보 경선은 3월27일과 28일을 각각 실시한다고 잠정적으로 정해둔 상태다. 하지만 최종 경선 시기와 방법은 아직 유동적이다. 방송 토론회 개최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방송토론회를 개최한다면 광주시장 및 전남지사 후보 경선은 4월 초순으로 늦춰질 수 있다. 이달 2~4일까지 후보 공모를 받는다는 점에서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경선 시기가 결정될 전망이다.

오영식 공심위 간사는 28일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단 잠정안은 정했지만 후보 토론회 등에 따라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밝힌 뒤 "특히, 전남 및 전북지사의 후보 경선은 당초 계획대로 갈 수 있지만 광주시장 후보 경선 시기는 조정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선거 올인…의원 없는 '막장 도의회'

도정질의 임시회 소집 해놓고 거의 불참

'정족수 채우기' 소동…질의도 함량 미달

전남도의회가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와 '쌀 수급안정대책' 등 도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다며 임시회를 소집해놓고 정작 개회한 뒤에는 지역구 활동을 핑계로 무더기로 불참하는 등 파행 운영되고 있다.

도의회 의원들은 앞서 지난 1월 열린 임시회에서도 몰아치기 심의와 무더기 본회의 불참 등으로 파행을 거듭한 데 이어 또다시 구태를 되풀이해 '막장 의회'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달 26일 제2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및 대불산단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도정 질문을 펼쳤다.

이날 회의는 그러나 의사 정족수 미달 사태로 당초 예정인 10시보다 40분 넘겨 개회하는 등 파행을 거듭했다.

전체 의원 50명 중 17명 이상 참석해야 하지만 40분 넘도록 의석이 채워지지 않아 의회사무처가 상임위별로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 가까스로 17명을 끌어 모은 뒤에야 회의가 시작됐다. 현안 업무를 제쳐두고 회의 시작 30분전부터 자리를 채운 공무원들은 1시간 넘게 기다려야 했다.

뒤늦게 2명의 의원이 참석했지만 무려 31명의 의원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그나마 도정 질문과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수시로 자리를 비우는 등 불성실한 행태도 여전했다.

특히 이홍제(민주·순천 2)의원은 지난 1월 열린 246회 임시회 본회의 2차례를 모두 불참한데 이어 이번 247회도 2차례 본회의를 모두 '결석'했고 송주호(민주·완도 1)의원도 246회 본회의 2차례 및 이번 임시회 2차 본회의 불참 등 모두 3차례를 "지역구 행사와 주민들이 부르는데 어쩔 수 없지 않냐"면서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호균(민주·목포2) 부의장, 강우원(민주·영암 1), 고택윤(민주·구례 1), 김석원(민주·무안 1), 김종철(민주·여수1), 이기병(민주·나주 1), 이탁우(민주·보성 2), 이홍제(민주·순천 2), 정창옥(민주·장성 2), 황병순(민주·보성 1) 의원 등 10명은 이번 임시회 개회 때와 도정 질문이 열리는 2차 본회의 등을 참석하지 않았다.

의원들의'함량 미달'식 질문도 되풀이됐다. 강우석 의원의 'F1 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교통·숙박시설 확보대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묻는 질문은 지금껏 여러차례 발표된 내용을 다시 묻는 수준에 불과했다.

조상래(민주·곡성 1)의원의 'F1 경주장 내 관람석 배치 재검토'질문이나 장일(민주·진도 1)의원의 '섬 관광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지역 집중 개발 의향'을 묻는 질문도 이미 알려진 '대안 없는 시간떼우기식' 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같은 상황은 의원들이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활동에 '올인'하면서 빚어지고 있다는 게 지역 정치권의 분석이다.

전남도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비판하고 개선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도정 질문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보니 3월과 4월 예정된 임시회에서도 파행 운영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선거를 앞두고 각종 지역 행사의 얼굴 내밀기에 열을 올릴 수 밖에 없고 공천을 고려하면 국회의원 모시기도 소홀할 수 없는 만큼 몰아치기로 해치우는가 하면, 겉핥기식 현장 활동 등 의정활동은 뒷전으로 밀리지 않겠냐는 것이다.

이 때문인지 일각에서는 "지역민들이 이들 의원들에게 4년간 시급한 지역 현안 해결 등 지방자치와 생활정치를 위해 애써달라며 표를 준 만큼 이번 선거에서 본연의 임무와 유권자와의 약속을 저버린 의원들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지방선거 1대1 구도 만들어라"

광주·전남, 野4당·무소속·시민단체 '반민주 연대' 꿈틀

민주당이 여당 역할을 하고 있는 광주·전남지역에 '반민주 연대' 움직임이 꿈틀 되면서 6·2 지방선거의 변수로 떠오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 전부인 광주시의회가 경찰력까지 동원, 기초의원 4인 선거구제를 분할한 데 대해 반발해 민주노동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창조한국당 광주시당이 선거 연대를 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광주 희망과 대안'도 최근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취지를 전면 부정한 4인 선거구 분할에 찬성한 광주시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3분의 1을 무공천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지역민의 냉혹한 심판을 면치못할 것"이라고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따라 소수 야당이나 무소속 연대 후보가 민주당과 1대1 구도를 현실화할 경우,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민주당의 '지방자치 일당 독재' 심판이 선거판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까지는 광주지역 5개 구청장과 지방의원 선거에서 소수 야당 연대 가능성이 충분하다. 또 소수 야당 세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전남의 경우 상당수 시·군에서 무소속 후보들의 연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우선 여수·순천·광양시 등 동부권 도시는 모두 현역 시장과 국회의원 간 정치적 대립이 심각해 현역 시장의 공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공천에 탈락한 현 시장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강행, 같은 시의 다른 후보들과 나아가 타 시군의 무소속 후보와 연대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또 고흥군의 경우 박병종 군수의 민주당 공천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김학영 전 고흥경찰서장과 진종근 전 군수 간, 구례군은 서기동 현 군수가 공천될 경우 전경태 전 군수와 박인환 전남도의회 의장 간에 각각 무소속 연대가 시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광주지역 4개 소수당은 가까운 시일 내에 실무 접촉을 하고 구체적인 연대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전남지역 시군지역 후보들도 민주당의 공천 결과를 보면서 무소속 연대 행보를 실행에 옮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당 또는 후보 간 이념과 정치철학의 차이가 있고, 지역마다 입후보 예정자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선거 연대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지방선거마다 무소속 후보의 돌풍이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광주시당에서 악수를 둬 반민주 바람이 불 것이 우려된다"며 "중앙당 차원의 대비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